

종합·해설

■ 국회 정상화 열쇠 '3대 현안' 여야 입장은

- ① 내곡동 사저 **민주 국조 요구 새누리 수용 가능성**
- ② 민간인 사찰 **"의혹 해소" 여권 내부 특검 기류 확산**
- ③ 언론사 파업 **"개입 부적절" "청문회 하자" 입장 맞서**

19대 국회 개원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언론사 파업의 처리 등 3대 쟁점을 놓고 여야 대립이 깊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현안에 대한 조율이 마무리될 경우 국회가 정상화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새누리당은 일단 특검으로 방향을 잡았다. 검찰의 수사가 국민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수위를 높여선(先) 국정조사, 후(後)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13일

"먼저 국정조사를 하고 수사권이 없어 미진한 것 등은 특검으로 넘기면 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수용할 여지를 남기고 있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어떤 사안이든 국민의 의혹이 남아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 해소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다만,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국조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내곡동 부지뿐 아니라 과거 '노무현 정부' 때의 봉하마을 조성까지 대상으로 삼자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해왔으나 새누리당은 특검과 불법사찰방지특별법 카

드로 맞붙을 놓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불법사찰에 대해 국민적 비판이 확산하자 새누리당 내에서도 국조 찬성파가 많아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적 의혹해소를 위해 서하면 특검은 물론 국조까지 검토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기류가 확산하는 것이다.

▷언론사 파업=이견이 좁혀지고 있는 두 사안과는 달리 언론사 파업 문제는 양당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언론사의 내부 문제가 '정치파업'의 성격이 짙은 만큼 정

치권이 개입하기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의 입장은 강경하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쟁점에 대한) 상임위별 국정조사가 보장된다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3개 상임위의 위원장직을 주지 않아도 좋다. 국조가 되면 우리는 안 가져도 좋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직 특검 등 조사방식을 결정해야할 국면은 아닌 것 같다. 원 구성이 중요한 과제이므로 전체적인 틀에서 봐야지 특검을 할지, 국조를 할지 등 단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누리 '경선룰 대립' 더 꼬인다

논의 기구 구성방법 놓고 친박-비박 '으르렁'

경선룰을 놓고 새누리당 친박(親朴·친박근혜)과 비박(非朴·비박근혜) 주자 간 대립이 깊어지고 있다.

우선, 양측은 경선 룰 논의기구 구성 방법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황우여 대표가 제시한 4가지 방안, 즉 ▲최고위에서 직접 논의하는 방안 ▲최고위 산하에 두는 방안 ▲경선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 ▲별도기구를 설치하는 방안 가운데 비박 주자측에서는 '별도기구'를, 친박은 '최고위 논의'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비박주자 측 관계자는 13일 "별도의 경선 룰 논의기구를 만든다면 검토해 볼 수 있다"면서 "그 이외의 다른 안은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친박 일각에선 별도기구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문제는 논의기구에 대해 합의점을 찾더라도 더 큰 쟁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완전 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를 놓고 양측이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을 태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몽준 전 대표와 이재오 의원, 김문수 경기지사 등 비박주자 3인방은 대선승리를 위해서는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친박 측은 지역별 순회경선과 선거인단 규모 확대는 검토가능하지만 오픈프라이머리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양측의 대립이 깊어지면서 박근혜 전 대표의 결단이 임박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추미애 대선경선단장
"당권·대권분리
규정 유지해야"

민주당 대선경선준비기획단장인 추미애 최고위원은 13일 "대선후보는 대통령 선거 1년 전 지도부에서 사퇴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추 최고위원은 이날 "당권·대권 분리 규정은 이미 정해진 룰 아닌가. 룰을 지키는 게 공정성을 담보하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최고위원은 "이 룰이 풀리면 대선후보 경선에 뛰어들겠다는 분도 있지만, 이미 룰에 따라 경선을 준비하는 분도 있다"며 "기술적인 문제, 표현적인 문제를 수정하는 것을 빼고는 룰을 지키는 게 원칙에 맞다"고 강조했다.

당권·대권 분리 규정이 유지된다면 지난달 4일까지 최고위원을 지낸 김부겸·문성근 전 최고위원 박영선·이인영 의원 등은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할 수 없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홍문표 "FTA이득 일부 농어민 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13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등 FTA 이행으로 발생하는 무역이익의 일정부분을 환수해 농어업인들에게 지원하는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FTA 이행으로 무역이익이 발생하는 산업으로부터 일정 부분을 환수해 FTA 기금과 축산발전기금에 각각 납입시킨 뒤 농업인과 축산인들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무역이익을 내는 산업과 그 규모를 파악해 이익금의 환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무역이익의 규모와 대상을 조사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4·11총선 비용 보전액 892억 지급

선관위, 4개 정당·후보 574명에
통합진보 김선동 의원 개인 최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공식선거법에 따라 지난 4·11 총선에 참여한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약 892억원의 선거비용 보전액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4개 정당과 574명의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해 서면 심사와 현지실사를 실시했으며 청구금액 1025억원 가운데 133억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비례대표를 배출한 4개 정당(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선진통일당)은 183억원, 지역구 후보자들은 708억원을 각각 보전액을 지급받았다. 지역구 후보자의 보전금액은 18대 총선의 757억원에 비해 78억원이 증가했다.

보전 대상 후보자는 574명(전체 지역구 후보자는 총 928명)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보전받은 사람은 537명, 보전받은 사람은 37명이다.

개인별로는 통합진보당 김선동(순천·곡성) 의원이 2억3100만원

으로 최대액을 보전받은 반면, 제주갑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장동훈 후보는 300만원으로 최소액을 보전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의 경우 총선에서 당선되거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할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득표수가 10% 이상 15% 미만일 경우는 선거비용의 반액을 국가가 보전토록 하고 있다.

중앙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이후라도 위법행위와 허위 보고 등이 적발될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지난 12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김두관 경남지사의 저서 '아래에서부터' 출판기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두관 '대선 출정식'

출판기념회 정치권 인사 등 3000여명 참석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지난 12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대규모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대권행보를 본격화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중앙정치권 인사 등 3000여명이 대거 참석해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통합당에 출정한 분들이 많지만 지금 모습으로는 새누리당 박근혜를 극복하는 게 쉽지 않

다"며 "당내 후보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면 누가 표의 확실성이 있는지, 박근혜 후보를 꺾을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또 현재의 낮은 지지도에 대해선 "순위는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 지금은 미미하지만 얼마든지 국민의 관심을 받으며 승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전대 이종투표
생각보다 더 많을 것"

이종결 최고위원

민주통합당 전대회에서의 이종투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13일 이종결 최고위원이 "(이종투표)가 현재 한 명이 발견됐지만 신고돼 있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수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 "두 번 투표한 사람이 스스로 말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가려지게 돼 있다. 더 많은 예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경매투자

▶경매비법 배우면서 수익 내실본
▶입찰반4명 / 회비 550만원
▶특수물건만 취급

자본주 모집 (10억 이상)

주 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OC & A Investment Institute
H·P 010 3605 5000 TEL 062 525 50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2번지
E-mail : csg5000@hanmail.net

부실채권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각종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수수료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미래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무조건적 시공상담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옥상,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덤핑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 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